

지방재정 위기 진단 및 대안 토론문

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

1. 지방재정 위기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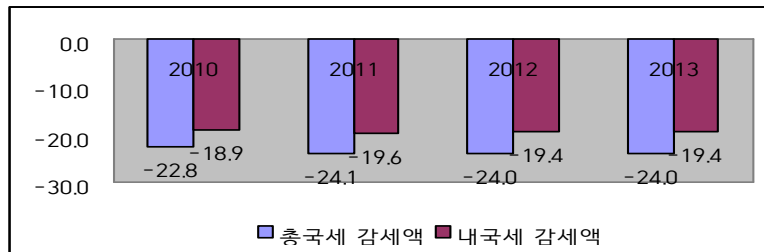
1)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¹⁾

-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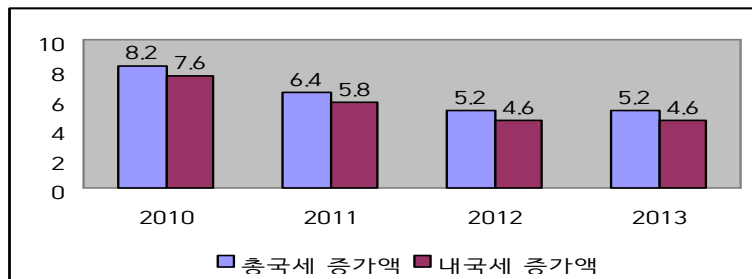
(소득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근로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)

- 08년 ~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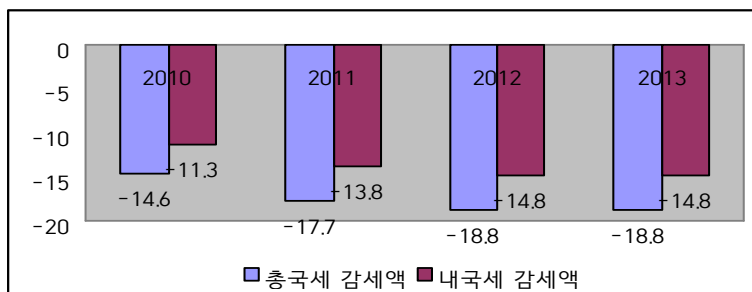
.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(단위 / 조)



.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(단위 / 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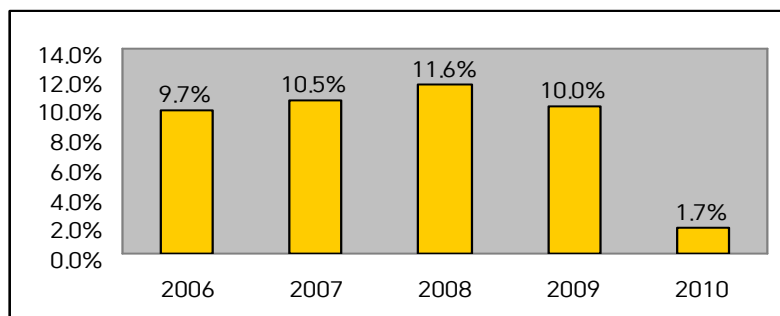
. 08년~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(단위 / 조)



1) 2010년 국회예산처 자료 근거

2) 2010년 국회예산처 자료 토대로 작성

-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³⁾ ; 2010년 급감하기 시작 (단위 / %)



- . 지방재정 총액 / 06년(101조), 07년(112조), 08년(125조), 09년(138조), 2010년(140조)
- . 2010년 지방예산 순계증가율이 급감한 것은 대규모 감세정책의 악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

- 2008년 ~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-18조6천억 감소예상

| 구 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금 액 | 1조 4천억 | 4조 7천억 | 3조 8천억 | 4조 4천억 | 4조 3천억 |

- .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(국회 예산처)
 - + 감세영향(4조 7천억), 경기침체 영향(1조 9천억), 지방세 비과세 영향(4천억)
- .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
 - + 전국 2조1천억원(충남 1,252억, 대전 673억)
 - + 종합부동산세수 감소(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0억씩 배부)
 - * 종합부동산세수는 취득등록세 감소분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100% 지방재정으로 활용
 - * 종합부동산세수 감소사례 / 동구 - 111억(2008년) 94억(2009년) 45억원(2010년) 매년 감소

- 과거 정권별 지방교부금 추이

| 구 분 | 김영삼 정부 | 김대중 정부 | 노무현 정부 | 이명박 정부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방교부금 증가추이 | 58.4% | 92.6% | 115.1% | -8.2% |

- .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
- . 지방교부금 감소는 지방재정위기의 진짜이유가 되고 있음

- 지방채 잔액 현황 / 2009년말 26조원으로 08년말에 비해 6조원 증가(33%)

- 지방통합재정수지 현황

| 총 계 | 2008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| 2009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-27조원 | 20조 흑자 | -7조 적자 |

3) 예산순계란 자치단체간 회계간 내부거래, 자치단체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
여기서 지방정부 예산(140조원)은 지방정부재정사용액(134조)+교육청전출금(6조)을 말함

-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2010년 100조에 이를 전망

| 구 분 | 2006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금 액 | 38조 2천억 | 53조 1천억 | 66조 5천억 | 83조 4천억 | 100조 전망 |

* 대전도시 개발공사 07년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,765억원으로 급증

2) 5개구청 지방재정 위기 실태

- 5개구청 회계별 본예산 규모 및 재정자립도 현황 (단위 : 억원)

| 시도별 | 10본예산 합 계 | 일반회계 | | | 특별회계 | | | 10재정 자립도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| | 10본예산 | 09본예산 | 증가율 | 10본예산 | 09본예산 | 증가율 | |
| 합계(A+B) | 37,884 | 30,409 | 28,575 | 6.4 | 7,475 | 6,733 | 11.0 | 43.5 |
| 시 본청(A) | 26,853 | 20,171 | 19,200 | 5.1 | 6,682 | 5,954 | 12.2 | 54.7 |
| 소계(B) | 11,031 | 10,238 | 9,275 | 9.2 | 793 | 779 | 1.8 | 21.4 |
| 동 구 | 2,303 | 2,170 | 2,042 | 6.3 | 133 | 123 | 8.1 | 12.2 |
| 중 구 | 2,079 | 1,919 | 1,729 | 11.0 | 160 | 143 | 11.9 | 18.4 |
| 서 구 | 2,603 | 2,511 | 2,291 | 9.6 | 92 | 110 | △16.4 | 22.4 |
| 유성구 | 2,208 | 1,838 | 1,700 | 8.1 | 370 | 375 | △1.3 | 32.8 |
| 대덕구 | 1,838 | 1,800 | 1,613 | 11.6 | 38 | 28 | 35.7 | 18.6 |

- . 5개구 재정자립도 12.2%~32.8%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
- .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득등록세는 2,777억원으로 08년 3,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
- .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~22억원 감소함

-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재원부족액 현황 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계 | 동구 | 중구 | 서구 | 유성구 | 대덕구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계 | 1,232,190 | 265,787 | 223,683 | 294,928 | 219,686 | 228,106 |
| 예산규모 | 1,090,054 | 233,300 | 191,868 | 266,847 | 192,750 | 205,289 |
| 재원 부족액 | 142,136 | 32,487 | 31,815 | 28,081 | 26,936 | 22,817 |
| 인건비 | 40,390 | 10,489 | 4,428 | 8,418 | 8,100 | 8,955 |
| 국세비보조사 업 | 42,803 | 12,131 | 9,817 | 6,222 | 8,562 | 6,071 |
| 기타경비 | 45,253 | 7,467 | 13,755 | 11,842 | 7,212 | 4,977 |
| 세입결함분 | 13,690 | 2,400 | 3,815 | 1,599 | 3,062 | 2,814 |

* 기타경비 내역 / 청소대행비, 기금전용, 쓰레기 반입수수료, 폐기물처리비용, 전기요금 등

- 대전동구청사 신청사 건립중단 사태

- . 대전동구청사 현재 47% 공사진행된후 공사중단
- . 707억의 총 공사비 가운데 360억원 조달못해 공사중단
- . 현재 동구청 일반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75% 밖에 편성안되어 있음
- . 동구 미확보 예산, 32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%가 넘는 규모

- 5개구청 재정결합금액 1,421억원(전체예산의 13%)

| 구 분 | 동구청 | 중구청 | 서구청 | 유성구청 | 대덕구청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금 액 | 325억 | 318억 | 280억 | 269억 | 228억 |

* 국비, 시비 보조사업도 중단하고 사회복지 구비부담도 못할 상황

- 지난 7월 동구청을 비롯해 5개구청 대전시에 재정지원 요청

- . 동구청 200억, 중구 200억, 서구 200억, 대덕구 150억, 유성구 100억
- . 대전시 지원만이 살길인 구청들이지만 대전시 거부
- . 대전시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은 현실

- 5개구 사회복지 예산의 증감추이 4) (단위 : 백만원, % / 최종기준, 09년은 제1회추경)

| 구 분 | 2005년 | 2006년 | 전년 대비 | 2007년 | 전년 대비 | 2008년 | 전년 대비 | 2009년 | 전년 대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동구 예산액 | 164,350 | 180,034 | 9.54 | 199,004 | 10.54 | 235,500 | 18.34 | 222,530 | △5.51 |
| 사회복지비 | 60,512 | 66,973 | 10.68 | 78,318 | 16.94 | 100,155 | 27.88 | 102,119 | 1.96 |
| 구비부담액 | 11,399 | 12,117 | 6.30 | 13,939 | 15.04 | 12,732 | △8.66 | 6,847 | △46.22 |
| 중구 예산액 | 144,031 | 160,428 | 11.4 | 167,730 | 4.6 | 190,477 | 13.6 | 194,717 | 2.2 |
| 사회복지비 | 42,670 | 54,854 | 28.6 | 68,026 | 24.0 | 84,321 | 24.0 | 91,653 | 8.7 |
| 구비부담액 | 9,241 | 12,167 | 31.7 | 14,567 | 19.7 | 11,612 | △20.3 | 9,579 | △17.5 |
| 서구 예산액 | 371,058 | 468,304 | 30.92 | 496,527 | 13.19 | 628,619 | 51.74 | 600,152 | 6.32 |
| 사회복지비 | 23,586 | 31,270 | 32.6 | 37,851 | 21.1 | 64,342 | 69.9 | 70,707 | 9.9 |
| 구비부담액 | 11,882 | 15,164 | 27.6 | 14,709 | -3.0 | 15,412 | 4.8 | 14,087 | -8.6 |
| 유성구 예산액 | 125,237 | 151,757 | 21.2 | 160,000 | 5.43 | 194,000 | 21.3 | 183,800 | △5.3 |
| 사회복지비 | 24,719 | 37,177 | 50.4 | 41,879 | 12.6 | 56,286 | 34.4 | 57,184 | 1.6 |
| 구비부담액 | 10,200 | 10,357 | 1.5 | 10,951 | 5.7 | 13,272 | 21.2 | 9,582 | △27.8 |
| 대덕구 예산액 | 127,915 | 158,401 | 28.83 | 160,936 | 1.60 | 195,359 | 21.39 | 180,100 | △7.81 |
| 사회복지비 | 40,899 | 52,523 | 28.42 | 58,733 | 11.82 | 78,145 | 33.05 | 75,316 | △3.76 |
| 구비부담액 | 6,620 | 11,655 | 76.06 | 11,468 | △1.60 | 11,803 | 2.92 | 9,376 | △20.56 |

- . 대전시 사회복지예산 05년부터 07년까지는 매년 증가추세, 08년도부터 감소추세
 - + 5개구의 사회복지부문의 광역 및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
 - +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의 확보도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
- . 대전시는 2010년도에 예산규모 3조원 시대를 열었으나, 복지부문에서는 61개사업에 152억원

4) 대전광역시 제5대 서구의회 한진걸 의원이 2009년 작성한 문서를 재구성하였음.

을 삭감하였고 50%이상을 삭감한 경우도 10개 사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

- 대전시 보건위생과 예산편성 흐름

(단위 : 천원, %)

| 구 분 | 2010년 | 2009년 | 2008년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액 | 30,800,334 | 30,501,294 | 31,939,211 |
| 국 비 | 3,320,068(10.8) | 4,145,096(13.6) | 7,669,179(24.0) |
| 광역발전계정 | 37,602(0.1) | - | - |
| 기금보조금 | 10,596,892(34.4) | 8,533,973(28.0) | 8,809,879(27.6) |
| 분권교부세 | 4,749,380(15.4) | 4,785,871(15.7) | 4,768,292(14.9) |
| 소 계 | 18,703,942(60.7) | 17,464,940(57.2) | 21,247,350(66.5) |
| 시 비 | 12,096,392(39.3) | 13,063,354(42.8) | 10,691,861(33.5) |

- . 보건위생 예산의 경우 국비지원의 대폭 감소하면서, 시비 기금보조금은 늘어나는 추세
- .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감소, 저출산예산 전무,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편성안됨

-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 5) 현황 6)

(단위 / 천원)

| 구 분 | 2006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부문별 합계 | 06년~09년 증감율%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지 하 철 | 134,894,660(59.4%) | 161,625,152(63.9%) | 167,031,618(75.5%) | 165,001,096(68.7%) | 628,552,526(66.8%) | 22.2% |
| 시 내 버 스 | 17,116,706(7.5%) | 20,683,860(8.2%) | 22,113,912(10.0%) | 24,006,943(10.0%) | 83,921,421(8.9%) | 40.2% |
| 화물택시 | 47,443,503(20.9%) | 44,716,134(17.7%) | 14,614,794(6.6%) | 42,009,955(17.5%) | 148,784,386(15.8%) | -11.4% |
| 도 로 (기 타) | 27,545,587(12.2%) | 25,774,254(10.2%) | 17,541,491(7.9%) | 9,207,208(3.8%) | 80,068,540(8.5%) | -66.6% |
| 년도별 합계 | 227,000,456(100%) | 252,799,400(100%) | 221,301,815(100%) | 240,225,202(100%) | 941,326,873(100%) | 5.8% |
| 교통 부문 대비 비율 | 46.3% | 67.4% | 46.7% | 61.5% | 54.4% | - |
| 대전시 예산 대비 비율 | 10.9% | 11.3% | 9.2% | 9.6% | 10.2% | - |
| 교통부문 합 계 | 490,496,312(100%) | 374,851,585(100%) | 473,402,246(100%) | 390,584,954(100%) | 1,729,335,097(100%) | - |
| 대 전 시 전체예산 | 2,074,697,000 | 2,238,489,000 | 2,402,118,000 | 2,515,393,000 | 9,230,697,000 | - |

- . 09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2천402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(2조5천153억원) 대비 9.6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905억원의 67.4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됨
- .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50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의 68.7%에 이름

5) 공적보조란? 편의상 만든 용어로서 대전시 전체예산 가운데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 발생 내역을 보면, '유가 보조', '지하철 적자', '지하철 부채상환', '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', '도시고속화도로 적자보존', '민자상환' 등이 해당됨.

6) 대전시 예산서(06~09년) 분석을 통해 재구성

2. 지방재정 위기 부추기는 민선5기 염시장 약속사업

1) 염홍철 시장 약속사업 년도별 소요사업비 내역

| 분야별 | 사 업 건 수 | | | 소 요 사 업 비(단위 / 억원)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| 계 | 임기 내 사업 | 임기 후 사업 | 계 | 재 원 별 | | | 연 도 별 | |
| | | | | | 국 비 | 시 비 | 기 타 | 2010 ~14년 | 2015년 이후 |
| 계 | 54 | 34 | 20 | 97,489 | 42,679 | 44,361 | 10,449 | 60,835 | 36,654 |
| 교육지원 | 4 | 4 | | 5,131 | 1,523 | 2,829 | 779 | 5,131 | 0 |
| 시민행정 | 2 | 2 | | 90 | 0 | 89 | 1 | 90 | 0 |
| 경제과학 | 12 | 7 | 5 | 16,255 | 5,503 | 5,058 | 5,694 | 11,198 | 5,057 |
| 문화관광 | 9 | 4 | 5 | 8,652 | 3,015 | 3,928 | 1,709 | 4,495 | 4,157 |
| 복 지 | 12 | 10 | 2 | 2,450 | 265 | 2,075 | 110 | 2,221 | 229 |
| 환경녹지 | 4 | 1 | 3 | 7,336 | 3,926 | 2,026 | 1,384 | 6,854 | 482 |
| 교통건설 | 7 | 5 | 2 | 36,073 | 21,695 | 13,606 | 772 | 16,198 | 19,875 |
| 도시개발 | 4 | 1 | 3 | 21,502 | 6,752 | 14,750 | 0 | 14,648 | 6,854 |

- 염시장은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7,489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음
 . 참고로 민선4기의 경우 총78개 공약사업에 9조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음
-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,805억원이 소요(민선4기의 경우 평균 1,174억 소요)
- 교통,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, 경제과학분야 외면
 . 민선 4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%를 경제과학>교통>도시분야 순으로 투입했으나
 . 반면, 민선 5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%를 교통>도시>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
- 재원별로 살펴보면 43.8%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(민선4기의 경우 62.6%)
 .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의심됨
 . 실제로 민선5기 시비부담은 4조 4,361억이지만, 민선 4기때는 1조 1,324억에 불과했음
 .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됨

2) 민선5기 공약 사업의 대형화

| 계 | 비 예 산 | 50억원 이 하 | 51 ~ 100억원 | 101 ~ 500억원 | 501 ~ 1,000억원 | 1,000억원 이 상 |
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54개 | 3개 | 11개 | 3개 | 17개 | 4개 | 16개 |

- 민선5기 공약사업가운데 500억 이상 소요 사업비 갯수가 총 20개로 37%에 이름

- (참고로 민선 4기의 경우 15개로 총 78개 사업 가운데 19.2%에 불과했음)
- 특히, 민선 4기의 경우 비예산을 포함 50억 이하 사업이 총 40개(51.3%)로 총사업의 절반
(민선 5기의 경우 50억이하 사업은 14개로 20%에 불과함)

3)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비

| 연번 | 사 업 명 | 추진기간 | 사 업 비 | | | | 사업 구분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| | | 계 | 국비 | 시비 | 기타 | |
| 계 | 10개 사업 | | 40,739 | 22,864 | 17,262 | 613 | |
| 1 |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| '10 ~'14 | 4,743 | 2,963 | 1,515 | 265 | 임기 내 사업 |
| 2 | 첨단 의료관광도시 육성 | '10 ~'15이후 | 313 | 50 | 143 | 120 | 임기 후 계속 |
| 3 |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| '10 ~'15 | 5 | - | 5 (용역비) | - | " |
| 4 | 중앙로 재창조 사업 | '10 ~'15이후 | 378 | 60 | 318 | - | " |
| 5 | 도시철도 2호선 건설 | '10 ~'15이후 | 30,000 | 18,000 | 12,000 | - | " |
| 6 | 대전 푸드 & 와인 페스티벌 | '10 ~'14 | 45 | - | 45 | - | 임기 내 사업 |
| 7 |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 | '10 ~'15이후 | 2,500 | 1,000 | 1,500 | - | 임기 후 계속 |
| 8 |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| '10 ~'14 | 42 | - | 42 | - | 임기 내 사업 |
| 9 |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 지원 | '10 ~'14 | 687 | - | 687 | - | " |
| 10 |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| '10 ~'14 | 2,026 | 791 | 1,007 | 228 | " |

-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건설비만도 3조원을 예상하고 있음
- . 염시장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,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. 3조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와 건설 부채는 대전시의 재정부담 초래
- . 수송효율이 전제되지 않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대중교통시스템 붕괴로 이어짐
- . 타 지역 사례처럼 지하철 1호선 재정적자에 더해 심각한 운영적자 초래
- . 결국 사회복지 등 타분야에 대한 재정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 저하 초래

3. 지방재정 위기 극복방안

1)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원칙과 방향

- .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충
- . 심화된 지방재정 불균형상태를 2007년 상황으로 복원

2)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방안

- 지방교부세 감세현황 /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총합 3조 4,626억원 감소
- . 대규모 감세로 2009년 기준 2조 1626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
- . 대규모 감세로 2009년 기준 1조 3000억원의 부동산교부세 감소
- 지방교부세 확충방안 => 교부세율 2.53% 상향조정(총 2조 4,626억 보충효과)
- .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필요

- + 지방교부세법 : 내국세 총액의 18.97%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
- + 2010년 내국세 총액은 136.9조원, 이 중 18.97%는 25조 9699억원
- + 감소액 3조 4626억원을 보충하려면 교부세율을 2.53%p 상향 조정해야
- . 교부세율 2.53% 상향 조정시 대전시의 경우 411억원의 지방교부세 보충효과 봄

3)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방안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추정

- . 대규모 감세로 2010년 기준 내국세 11조 4000억원 감소
- . 법규에 따라 내국세 감소액의 20%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을 가능성
- . 따라서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2조 2800억원으로 추정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방안 => 교부세율 1.67%를 상향조정(총 2조2,800억원 보충효과)

- .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, 내국세 총액의 20%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음
- + 2010년 내국세 총액은 136.9조원, 이 중 20%는 27조 3800억원
- + 감소액 2조 2800억원을 보충하려면 교부세율을 1.67%p 상향 조정할 필요
- . 교부세율 1.673% 상향 조정시 대전시의 경우 243억원의 지방교부세 보충효과 봄

4)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 신설 논란에 대한 의견

- 신설배경

- .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위기 불러오자 지방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, 소비세 신설
- . 문제는 이것또한 지방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난직면

- 지방소득세, 소비세 신설내용

- .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%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함
- . 09년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이 46조원이므로 10년도 소비세 세수는 2.3조원 내외 전망

- 지방소비세, 소득세 문제점

- . 단순히 '소득세할(割) 주민세'를 그 명칭만 바꾸어 '지방소득세'로 변경한 것이므로 대규모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세분을 전혀 보충하지 못함
- . 지방소비세의 경우도, 지방불균형 문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

5) 기타방안

-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낮춰줌
- +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지방비부담율(30%)을 낮춤 /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부담률(20%)

- + 영육아보육료 지원 기준보조율도 현재 지방의 경우 국비부담(40~60%)에서 70~90%로 확대
- 지방이양사업 중예, 노인,장애인,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함
-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총량을 축소, 일반교부재원 확대
- 투융자심사제도 강화
-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의 국비지원 확대
- 구조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,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해소에 위 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교부제도 일부 개선

6)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

-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
- 장단기적으로 확보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 능력을 대폭 높이도록 함
- 선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토목건설 위주의 예산편성을 자제함
 - + 특히,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
 - +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하는 신규사업을 자제함
-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
- 5개구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대전시는 구비의 매칭비율을 현실화 시키도록 함
-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정투자사업 이력제 도입
-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운영
-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관련정보의 전면공개 및 공청회 제도 활성화
- 정부의 감세정책 및 지방재정위기에 지방정부간 공동노력
-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활성화